

기업인 대상 최신 반부패 정책 자료집(2020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청렴·윤리 경영 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신 주요 반부패 정책 자료집을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 내용 (총 5건)

- ① K방역에 국민의 목소리를 더하다 (‘20.5.19)
 - ② 정부 출범 3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적 순간 10장면 (‘20.5.13)
 - ③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284개→467개’로 확대..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 예정 (‘20.5.13)
 - ④ 코로나19 피해 큰 대구경북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고충 방문상담 (‘20.5.19)
 - ⑤ (우수 청렴정책 사례) ‘참여’와 ‘공개’로 채용과정에 공정성을 더하다 (‘20.4.24)
-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부패방지) → 청렴자료실 → 청렴정책 일반

■ 문의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044-200-7619)

K방역에 국민의 목소리를 더하다!

- 10만 여건의 코로나19 관련 민원 데이터 분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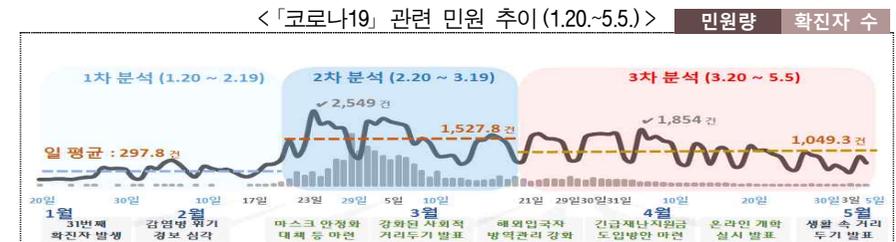
(2020. 5. 19,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 20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된 5월 5일까지, 3회*에 걸쳐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코로나19」 관련 민원 103,117건을 분석해, 정부 각 기관과 함께 국민들이 느끼는 각종 불편사항을 개선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 * 1차 분석 : ‘20.1.20.(국내 확진자 최초 발생일)부터 2.19.까지 민원 7,855건
- 2차 분석 : ‘20.2.20.부터 3.19.까지 민원 44,263건
- 3차 분석 : ‘20.3.20.부터 5.5.(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일)까지 민원 49,603건
-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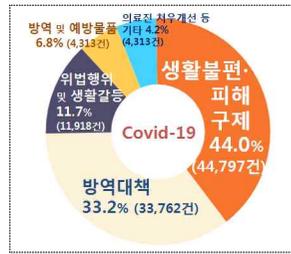
민원분석 결과, 국내 확진자 최초 발생(1.20.) 시기인 초기에는 중국발 입국제한 등 ‘방역대책’ 관련 내용이 많았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개학 등 ‘생활불편 및 피해구제’ 관련 사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추이를 살펴보면, 31번 확진자가 발생(2.18.)하고 누적 확진자가 100명을 돌파(2.20.)하면서 크게 증가하였고, 마스크 안정화 대책(3.5.),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3.21.) 등 방역대책이 강화되고, 긴급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구제 방안이 마련된 이후 4월부터 점차 감소하였다.



민원의 유형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불편 및 피해구제'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았고(44.0%), 다음으로 '방역대책'에 관련된 민원(33.2%),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에서 파생된 '위법행위 및 생활갈등' 관련 내용(11.7%), 마스크 등 '방역 및 예방물품' 관련(6.8%)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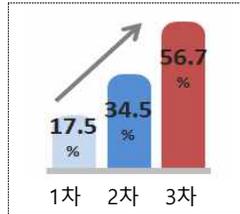
<「코로나19」 관련 민원유형>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계속 증가한 생활불편 및 피해구제 관련 민원은 초기(1.20.~3.19.)에는 '여행·결혼식 등의 취소·연기에 따른 수수료 및 환불 분쟁', '경기 악화로 인한 중소기업인과 근로자 지원', '각종 시험 연기·취소로 발생하는 피해구제',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불편사항' 등이 많았다.

이후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이 본격화 되고 온라인수업이 장기화되면서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원', '등교개학 연기 및 온라인 개학에 따른 불편사항', '대학교 등 등록금·기숙사비 환불' 등과 내용이 늘어났다(3.20.~5.5.).

<생활불편 및 피해구제 관련 민원추이>



<주요 민원사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지원 골든타임 넘기지 마세요]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금을 3월 중순 신청했지만, 한 달이 넘는 지금도 예산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만 들립니다. 뉴스에서는 2월 말부터 몇 조, 몇 조 지원한다지만 실제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4.20.)

[온라인 수업 전달사항의 정확한 안내 필요]

온라인 수업과 관련하여 주간학습 안내와 일일학습 안내 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사소한 실수일지라도 집에서 밴드에 올려주는 내용으로만 학습을 시켜야하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혼란이 부담스럽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좀 더 꼼꼼하게 검토해서 올려주기 바랍니다. (5.4.)

[대학교 등록금 일부 반환이 필요합니다.]

도서관, 강의실, 실험실 등 학교시설도 사용하지 않으며 온라인 강의로 수업의 질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금에 비해 2주 수업도 하지 않았고, 똑같이 온라인 강의를 듣는데 단과대학별로 등록금이 다릅니다. 학교에서 교육부 지침에 따른다고 했으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4.19.)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가장 많았던 방역대책 관련 민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대책 등 방역대책이 신속하게 추진되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초기(1.20.~3.19.)에는 '중국발 입국제한', '신친지 등 집단모임 폐쇄 및 금지', '외국인카지노 등 다수가 모이는 장소 방역 강화', '확진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 '개학연기' 등 다양했으나, 국내 확진자가 차츰 줄어들면서 '느슨해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우려', '등교개학에 대한 찬반' 등이 주를 이루었다(3.20.~5.5.).

<방역대책 관련 민원추이>



<주요 민원사례>

[코로나19 아직 종료 아니네요! 제발 마스크 착용 독려해 주세요]

요즘 확진자가 없어 시민들이 다소 하이해진 듯해 불안을 감할 수 없네요. 버스나 작은 병원 등에서 마스크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공공시설 이용시 마스크 의무화 및 생활화를 실천하도록 해 주세요. (4.24.)

[등교개학 결정 시 학교에서 준수해야 할 구체적 지침 마련]

등교 개학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학교에서 실행해야 할 구체적 지침을 정해주시면 더 안심하고 등교개학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4.)

초기에 비해 다소 증가한 위법행위 및 생활갈등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그 내용이 변화하였다.

1·2차 분석시(1.20.~3.19.)에는 '코로나19 치료제 허위·과장광고', '마스크 피싱사이트 등 판매 사기', '가짜뉴스', '종교집회' 등에 대한 신고가 많았으나, 코로나19 긴급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해외입국자가 늘어나자 '정부지원금을 악용한 보이스포싱 및 카드깡 등 불법행위', '자가격리를 위반한 해외입국자 등'에 대한 신고 및 단속 요구가 증가했다(3차, 3.20.~5.5.).

<위법행위 및 생활갈등 관련 민원추이>



< 주요 민원사례 >

[정부지원금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도와주세요]

코로나19 이후 어렵게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감사하게 ○○은행이라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대상자가 됐다며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 요구 후 은행어플 다운 받으라 해서 다운받았는데 그게 보이스피싱이더라구요. 4,200만원 정도 피해를 입었는데 경찰은 연락 기다리라는데 파산할 지경입니다. (4.20.)

[외국인(국내 거소 보유자)의 코로나19 방역수칙 미준수 의심사례 제보]

이달 영국에서 입국한 외국인 3인 가족(국내 거소 보유)의 코로나19 방역수칙의 위반이 의심됩니다.(격리기간 중에도 외출시도의 흔적이 보임) 신고 대상자가 직접 작성한 게시글을 토대로 특정가능성이 있어 제보합니다. (4.12.)

방역 및 예방 물품 관련 민원 또한 초기에는 '마스크 매점·매석 금지',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등의 내용이 주였으나, 공적마스크 등 마스크 수급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해외 가족에게 마스크 반출 허용' 등 사각지대 보완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변화하였고, 관련 정책이 안정화되면서 민원도 감소하였다.

<방역 및 예방 물품 관련 민원추이>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세계적 표준이 된 K방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실제 경험하고 느낀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된 국민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분석 외에도 코로나19 관련 민원이 급증하기 시작한 지난 2월 12일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개시 시기인 5월 6일에 적극적인 민원 대응을 요청하는 민원예보를 발령한 바 있으며, 관계기관은 이를 참고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한편, 코로나19 민원분석 보고서는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정부 출범 3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적 순간 10장면

- 한눈에 보는 국민권익위 3년... ▲반부패 정책추진 기반 마련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부패인식지수 30위권 진입 등
- '포스트 코로나' 서민·취약계층 긴급민원 신속 해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제정 등 반부패 개혁 가속화 예정

(2020. 5. 13,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을 맞아 '반부패·공정 개혁, 국민권익 보호'라는 목표를 실현했던 가장 중요했던 순간 10장면을 선정해 발표했다.

아울러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사회취약계층이 사회 안전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긴급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제정 등 반부패 개혁에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국민들과 함께 한 반부패·공정 개혁의 핵심 장면 6가지를 되짚어 본다.

#1.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 (2017. 9. 26.)

-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반부패 개혁의 첫 걸음을 떼다!



강력한 반부패 개혁 실현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를 10년 만에 복원하였다. 이로써 개별기관 단위를 넘어,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체계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기반을 확립했다.

이를 시작으로, 시민사회·언론 등 각계 대표가 직접 반부패 정책을 제안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출범(18.3월), 국민 참여에 기반한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 수립(18.4월) 등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반부패 거버넌스를 공고히 하였다. 그 결과 청렴사회민관협의회가 제안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이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되었고, '특수활동비 개선' 방안 등이 실제 제도 개혁으로 이어지는 성과가 있었다.

#2. 생활적폐대책협의회 출범 (2018. 12. 10.)

- '생활 속 반칙과 특권' 해소, 국민의 눈높이까지

권력형 비리 등 전통적 부패의 척결을 넘어, 일상 속의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까지 개선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담아 '생활적폐 대책협의회'를 출범하였다.

정부, 생활적폐 청산할까...유치원비리등 9대과제 총력
 갑질 근절, 공공분야가 솔선수범...민간으로 확산한다
 사립유치원 전체 3천801곳에 에듀파인 도입...회계 비리 차단
 보조금은 눈먼 돈? 부정수급 더 이상은 없다!
 2억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유치장 간다

협의회에서는 갑질, 학사비리, 탈세 등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주는 9개 과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중이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갑질금지 규정 신설,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3법 개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 도입 등 법·제도의 개선 성과가 행태·문화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3.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 발표 (2019. 2. 20.)

- 공공기관 채용비리, 끝까지 잡는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국민, 특히 청년세대에게 깊은 불신과 좌절감을 안겼다. 이 같은 채용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국민 권익위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2017년부터 매년 공공기관 채용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2년간(2017~2018년)의 실태점검 결과 총 519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하여 연루자는 엄중 제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3,294명에게는 채용시 기회를 부여했다.

또한 채용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특별채용 규정 일괄 정비,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인원 공개 의무화 등 개선대책도 마련해 시행하였다. 현재 진행중인 2019년도 채용실태 전수점검 결과는 금년 6월 발표할 예정이다.

#4.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19. 4. 16.)

- 소중한 나랏돈 꼭 필요한 곳에, 더 이상 눈먼 나랏돈은 없다!

각종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약 229조원에 이르는 공공재정을 부당하게 청구하면 그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는 「공공재정환수법」을 제정하여 2020년 1월부터 시행했다. 허위·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의 경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고액 부정청구자의 명단도 공표한다.

공공재정환수법



금년 4월에는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및 이행점검 전담부서도 신설해 공공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했다.

#5. 2019년도 부패인식지수(CPI) 발표 (2020. 1. 23.)

- 정부 출범 후 3년 연속 평가 결과 상승, 세계 30위권 진입

부패인식지수(CPI) 변화 추이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19년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100점 만점에 59점, 180개국 중 39위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RERCAS)가 발표한 2019년 공공청렴지수(IPI)도 117개국 중 19위,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차지하는 등 우리 정부와 민간부문의 종합적 반부패 개혁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6.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대상법률 대폭 확대 (2020. 4. 29.)

-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284개→467개)로 신고자 보호 강화

그간 공익신고 대상은 284개 법률 위반행위에 한정되었으나, 11월부터는 국민 누구나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학원법, 병역법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180여개 중요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신고대상) 6대 분야, 467개 법률 위반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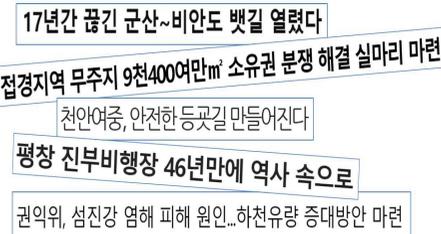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신고자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도입, 신고자 예우·격려를 위한 '공익신고의 날'(매년 12.9.) 선포 등 신고자 보호·지원 강화에 주력해 왔다. 금번 법 개정으로 신고자 보호 범위도 한층 넓어져, 국민들의 용기있는 신고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반부패 개혁과 함께 고충민원 해소,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권익 구제와 따뜻한 국민소통으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

#7. 군산시 비안도 도선운항 등 집단민원 현장조정 (2018. 12. 18.)

- 장기 미해결·집단 민원 해결로 사회적 갈등 예방



국민권익위는 지난 3년간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등으로 인해 발생한 7,200여건의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하였다. 특히, 민-관, 민-민 갈등이 복잡하게 얽혀 쉽사리 풀리지 않는 집단민원의 해결에 역량을 집중했다.

이를 통해 182건의 집단민원을 조정함으로써 85,900여 명의 오랜 숙원을 해결했다. 그 결과 70년 만에 양구군 해안면 민통선 내 정책이주민들의 토지 소유권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만들고, 새만금 방조제 공사 이후 정규 배편이 없어 지역주민들이 목숨을 잃는 일까지 발생했던 군산 비안도에 17년 만에 뱃길을 다시 열었다.

또한 전신주와 같은 장애물로 교통사고 위험에 시달렸던 천안여중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로를 되돌려준 것처럼, 2020년에는 기획조사를 통해 전국 2,200여개의 초·중·고등학교에 보다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어촌, 전통시장, 임대주택, 산업단지 등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지역형·맞춤형 이동신문고',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통해 국민들의 생활불편, 기업경영 애로 등을 해결하는 국민중심의 현장소통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8.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도입(2018. 11. 1.)

- 전문가의 법적 조력으로 행정심판의 문턱을 낮추다!

국민권익위는 행정심판 청구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해 2018년 11월부터 지금까지 160여건의 국선대리인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였다.



2020년 하반기부터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국민들이 불필요한 서류 제출 부담 없이 한층 편리하게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민과 행정청이 모두 만족하는 갈등 해결을 위해 '행정심판 조정제도'를 확대하는 등 더 따뜻하고 촘촘한 권익구제에 주력하고 있다.

#9. 「한눈에 보는 민원빅데이터」 개통(2019. 1. 30.)

- 국민의 목소리, 민원을 넘어 정책이 되다!



국민신문고 등 국민소통 창구에는 연간 1,000만 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2019년 초 「한눈에 보는 민원빅데이터」를 개통해 국민 누구나 민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민원분석 결과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적 이슈 관련 민원을 심층분석해 각급 기관이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연결고리 역할도 적극 수행하였다. 특히 2019년 6월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민원 뿐 아니라 언론 빅데이터까지 연계·분석하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더 정확하고 활용도 높은 민원분석이 가능해졌다.

지난 2월에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와 함께 '대한민국 공약이슈' 누리집을 최초로 개통하여, 전국의 후보자들이 지역별 민원 데이터를 꼼꼼히 반영해 정책공약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10만 여 건의 관련 민원 데이터를 신속하게 분석·제공해 다양한 국민 불편사항을 조기에 개선함으로써, K방역 등 정부대책 수립에 적극 동참하였다. 그 결과 코로나19로 취소·연기된 어학시험 성적의 제출기한 연장, 해외유학 자녀·국제항해 중인 선원 등에 대한 마스크 반출 허용, 자가격리자 격리통지서 발급기준 개선 등 각종 생활 불편이 빠르게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그간 국민의 아이디어를 담아 미세먼지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공정한 모바일상품권 이용기준을 제시한 것처럼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에서 출발한 다양한 정책·제도의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10. 정부합동민원센터 개소(2019. 10. 1.)

- ‘한 곳에서 한번에’, 칸막이 없는 민원 종합상담 서비스 제공



2019년 10월 정부합동민원센터를 출범해 여러 기관과 관련된 복합민원도 칸막이 없이 한 곳에서 전문적·종합적으로 상담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각 부처에서 모인 전문인력들의 합동상담, 시·공간의 제약 없는 24시간 온라인 상담 등을 통해 최근의 코로나19 관련 고용불안, 가족돌봄휴가 사용, 마스크 수입절차 관련 문의 등 국민들의 다양한 민원상담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더 강한 추진력으로 다음 과제들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해 공직자 직무수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국민의 눈높이까지 강화하고, 입시·채용과정의 불공정이나 비정규직 차별 등 2030세대가 공감하는 ‘청년체감’ 공정과제와 생활 속 불공정 요소를 중점 발굴하여 개선한다.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공공기관이 소비자나 민간기업 등에 직권·재량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3년 동안 491개 공공기관의 불공정 사규 등 내부규정을 전수점검해 개선할 것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상황 속에 서민, 취약계층 등이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료 감면·조정, 의료비 지원 등과 관련된 긴급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간다. 민원현장의 의견 청취, 민원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영세·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관광지 내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현실적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따뜻한 권익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음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반부패·공정 개혁에 집중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고충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284개→467개' 로 확대...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 예정

-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주요 법률 대폭 추가...
공익신고자 보호 더욱 강화돼 -

(2020. 5. 13, 국민권익위)

기존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등 사회적 중요성과 시급성을 갖는 182개 법률이 새로 추가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안이 지난 5월 19일 공포되었다. 공포안은 올해 11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 신규 추가된 182개 법률과 별개로 현행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284개 중 폐지된 법률 3개는 삭제, 분법된 법률 4개는 추가해 총 대상법률 수는 467개임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가 2018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한 정부안에 있는 대상법률들과 20대 국회의원 발의안에 있는 대상법률들이 함께 반영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11년 9월 3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역대 가장 많은 대상법률이 추가된 것으로,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 대상이 대폭 확대돼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신고자들까지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변동

(2011.9.30.) 180개 → (2015.7.24.) 279개 → (2018.5.1.) 284개

현재 공익신고 대상은 ▲ 국민의 건강 ▲ 안전 ▲ 환경 ▲ 소비자이익 ▲ 공정한 경쟁 ▲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위반하는 '공익침해행위'다.

그동안 대상 법률은 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다양한 공익침해행위를 모두 반영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올해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신고 가운데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했다는 내용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하지 않아 공익신고로 처리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사회적 중요성과 시급성을 갖는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82개 법률 위반행위가 새롭게 공익신고 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행위 ▲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촬영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반포하는 행위 ▲ 병역의무자의 병역기피나 면탈 행위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나 학교 교직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등이 모두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신고자 보호가 더욱 강화되는 만큼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용기 있는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피해 큰 대구·경북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고충 방문상담

- 5월 21일 신용보증기금과 피해기업 경영자금 애로 청취,
대구성서산업단지에서 「기업고충 현장회의」 개최 -

(2020. 5. 19, 국민권익위)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지역 성서산업단지 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현장을 찾아 경영자금 애로 등 고충을 상담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21일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대구신용보증기금(본점, 대구지점)과 함께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피해기업들의 경영자금 문제를 청취하고 성서산업단지 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들을 찾아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진행하였다.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상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개최해 왔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최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고충 민원의 경우 유관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해당처분의 부당함에 대한 전향적 판단을 이끌어내 적극 구제하고 있다.

일례로 국가 R&D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관련 협약을 잘못 이해해 지원금 지급 불가 통보를 받은 민원에 대해 소관기관에게 입증자료를 재검증한 후 지원금을 지급토록 권고했다.

또 단순 실수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영세 자영업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처분청이 집행을 유예토록 했으며, 개발행위 인허가 지연과 코로나19로 복합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히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경기 위축으로 자금난에 처한 기업에게는 연구개발비 국비 지원을 알선하는 등 다수의 기업고충 민원도 해결했다.

국민권익위가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추진하는 이번 대구·경북지역 기업현장 방문은 코로나19로 가장 피해가 큰 업종인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제도개선 건의 등을 현장에서 직접 접수해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권태성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기업고충 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이번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귀 기울여 듣고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우선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우수 청렴정책 사례] '참여' 와 '공개' 로 채용과정에 공정성을 더하다

-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블라인드 채용 모니터링' 소개 -

(2020. 4. 24, 국민권익위)

경기도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직무능력 중심으로 선발해 공정채용 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에서 청렴정책 수립·추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별·분야별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산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우수 청렴정책으로 경기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사례를 선정했다.

경기도는 산하 공공기관별로 이뤄지던 채용을 통합 관리해 투명한 채용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을 활용한 'Full 블라인드 채용'(전 과정 정보가림 채용)으로 편견 요소와 선발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고, 정보가림 채용을 점검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높였다.

(공공기관 통합채용) 경기도는 2015년부터 산하 공공기관마다 상이한 채용절차를 통합한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운영해 공공기관의 채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비리 발생을 예방하고 있다.

< 공공기관 통합채용 절차 >



'따로, 또 같이' 하는 통합채용으로 채용과정에서 부패발생요인을 차단하고 기관 특성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고 있다. 채용공고, 원서접수, 필기시험은 경기도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시행하고, 이후 서류심사,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는 선발 예정기관이 주관해 시행한다.

먼저, 경기도는 기관별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거나 서류심사를 우선 실시하던 기존의 채용절차를 필기전형에 우선 응시하도록 변경해 응시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했다. 또 경기도 통합채용 누리집에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계획을 일괄 안내해 구직자의 채용정보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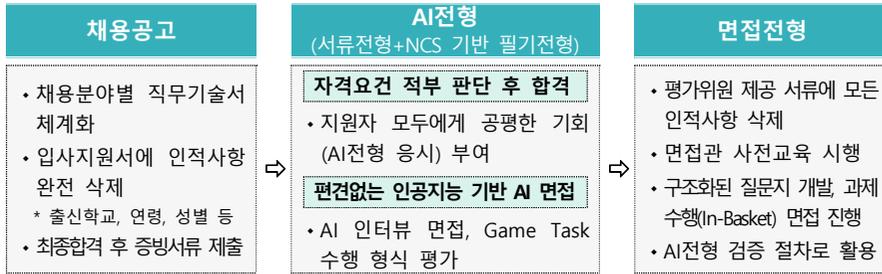
이와 함께, 산하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채용과정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면접시험은 직무중심의 정보가림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면접기준, 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한 면접관 사전교육도 실시한다. 또한, 기존에 1/2 이상 위촉하도록 한 외부위원 선정 기준을 2/3 이상으로 확대했다.

올해는 영어, 한국사, 일반상식이었던 필기시험 공통과목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기반의 평가로 개편해 직무능력 중심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블라인드 채용 모니터링)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정보가림 채용과 이에 대한 점검으로 채용과정에서의 부패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있다.

직무능력 중심의 인재 선발을 위해 2015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정보가림 채용을 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채용 방식을 개선해 2018년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Full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했다.

< 'Full 블라인드 채용' 주요 내용 >



지난해에는 면접전형 외부위원 인력풀(Pool)을 정비하고 정보가림 채용 위반 행위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가 점검하도록 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

특정인이 면접위원으로 자주 위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위원 인력풀을 79명에서 347명으로 확대하고, 여성위원의 비율도 높였다. 또, 외부위원 인력풀을 구성하는 전문분야를 8개에서 14개로 세분화하여 더 전문적인 직무능력 평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내·외부 전문가는 면접에 참관해 면접위원이 지원자에게 성별, 학력, 나이, 신체조건 등에 대한 질문을 하는지와 지원자별 질문순서, 할당 시간, 질문 수 등을 균등하게 배분하는지 등을 확인한다.

이러한 정보가림 채용 강화로 고졸,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및 국가보훈자 등의 채용이 증가해 인재의 다양성도 확보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지속적인 채용제도의 개선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질서를 확립하여 채용비리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